

막가는 노조에 초일류 삼성 음울한 미래

[바닥민심(66)] 삼성노조 도덕성 논란

8개 계열 노조 '금속삼성연대' 임무 무노조 포기 건 공동교섭 전쟁 선포 총수구속 최악 위기 중 물상식 비판 임금·성차·정년 첩보통 쟁기기 비등 "계열사 일률적 인상 요구 부적절"

문재인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에 대한 불만 여론이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의 집단행동에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친노조 일변도 정책으로 비대한 노조 권력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까지 권력형 노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삼성그룹과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병철 전대회장 시절부터 효율과 성장을 중시하면서 회사 내 무노조 분위기 형성에 애를 써왔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계열사 내에서 노조가 잇따라 결성되고 이들의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 삼성그룹 계열사 8개 노조는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총수부재' 초유의 위기상황 속 한노총 아래 모인 삼성그룹 8개 노조 집단행동 개시 금속삼성연대(이하 금속노련)는 전국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웰스토리, 삼성화재 에니카 손해사정, 삼성화재, 삼성SDI 울산, 삼성생명, 삼성에스원 직원 노동조합 등 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 8개 계열사 노조로 구성돼 있는 조직이다. 삼성그룹 계열사 노조가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금속노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으로 그룹 전체가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처음으로 그룹 측에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동 요구안에는 △올해 임금 6.8% 인상 △인사평가제도 개선 △불투명·불공정 성과제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정년 만 60세 보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요구안 내용 중 '임금 6.8% 인상'의 경우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노총의 임금 지침이다. 금속삼성연대 측은 각 회사별 사정에 따라 공동요구안 외 개별 요구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 7면에 계속



文대통령 향한 위안부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문제를 대통령님이(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한일 양국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중인 이용수 할머니. <관련기사 25면> 이종원 기자

文정부 비정규직 95만명 증가, MB정부 2배

유경준 "단기 일자리에만 몰두" 文 "범부처적 총력체제 대응"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 고용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1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2017-2020년) 동안 재정 투입을 늘려 단기 공공 일자리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95만명이나 늘어났다. 이는 이명박(MB)정부 47만명, 박근혜정부 53만명에 비해 두배 수준이다. 유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사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다"며 "정부가 노인 재정보조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로 이전 정권 대비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됐다"며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단기일자리 정책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또 다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주도 일자리 창출을 부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여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분기 내 90만개 직접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민간 고용유지 전방위적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기회 확대 대책 마련 △고용안정망 확충 및 직업훈련 고도화 등을 제시하며 "2월을 변곡점으로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 총력체제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찬주 기자 >> 10면에 계속

中企 50.3% "주52시간 도입 준비 안됐다"

사람인, 중소기업 400개사 조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업체들은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16일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0.3%가 아직 대응방안이 부족하

나,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먼저 주52시간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으로는 '인건비 상승(32.8%,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는 주 52시간제를 맞추려면 근로자의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 등 인력충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생산량 저하(23.8%)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발생(18.5%) △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16.3%) △새로운 근무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비용 발생(12.8%) △서비스 운영 시간에 차질 발생(12.8%) 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26%였다. >> 7면에 계속

THE HYUNDAI SEOUL

미래를 향한 울림

더현대서울

2021. 2. 26 여의도 GRAND OPENING

혁신적 비전으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뉴 글로벌 랜드마크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mall | 현대백화점연세점 | 한성 | 더한성닷컴 | H메션 | 현대리마트 | 현대리마켓 | 현대리푸드 | 현대리뷰어 | 현대리인어플리케이션